

가나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정책

2013. 10. 9



남 아 공 주 재 원

1. 최근 경제동향

□ 경제성장률

- 2011년 주빌리 유전의 생산효과로 14.4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가나 경제는 2012년 성장률이 7.9%로 하락하였으며, 2013년 1/4분기에는 다시 6.7%로 떨어짐. (가나 통계청)
 - 2013년 1/4분기 부문별 성장률은 서비스업(12.0%), 농업(1.1%), 산업(△0.8%) 등임.
 - 가나 정부의 2013년 성장률 목표는 8.0%인데 반해, IMF는 2013년 6.9%, 2014년 6.8%로 전망하고 있음. (2012년 가나 GDP 규모 406.8억불)
- * 주요국 GDP 규모: 한국 1.1조불, 미국 15조불, 중국 8.2조, 일본 6조 등

□ 환율

- 가나 세디화는 2013. 1월 미달러당 1.90 수준에서 최근까지 계속 평가절하되어 국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* 월별 미달러 대비 세디화 환율추이 (월말 은행간 평균환율, 중앙은행)
1월 1.90 → 3월 1.94 → 5월 1.97 → 7월 1.99 → 8월 1.99

□ 물가

- 2013. 1월 8.8%로 안정기조를 보였으나, 2월에 단행된 유류제품 가격인상, 세디화 평가절하 등에 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 - 2013. 7월 물가상승률은 11.8%로, 2010년 4월(11.6%)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2013년 물가상승률은 정부목표치(9%)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임.
- * 월별 물가상승률(%), 가나 통계청
1월 8.8 → 3월 10.4 → 5월 10.9 → 7월 11.8

□ 외환보유고

- 2012년말 53.5억불이던 외환보유고가 2013년 4월말 52억불로 감소하였으며 7월에는 다시 49.1억불로 감소함. (수입물량의 2.7개월 수준)
 - 7월말 달러표시 국채(10억불)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함으로써, 8월말에는 57억불로 증가함.
 - 가나 정부의 2013년도 외환보유 목표는 수입물량의 3개월치이나, IMF는 4.2개월치(81억불)를 권고하고 있음.

□ 무역수지

- 2013년 상반기 가나 수출은 75억불로 전년대비 0.3% 감소했으며, 수입은 86억불로 전년보다 2.6% 감소함.
 - * (2012년) 수출 135.4억불, 수입 177.6억불, 무역적자 42.2억불
- 수출
 - 2013년 상반기 금 수출이 27억불로 전년 32억불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, 코코아 수출도 12억불로 전년 16억불보다 감소함.
 - 다만, 주빌리 유전의 생산증가로 원유수출이 20억불(전년 13.5억불 대비 48% 증가)을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완화됨.
- 수입
 -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공산품, 원자재 등 모든 부문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면서, 전년도 상반기의 88.3억불보다 2.6% 감소함.

□ 이자율

- 국채 이자율은 22%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 - * 이자율 : 91일 만기 23.1%, 182일 만기 23.0%, 1년 만기 22.0%
 - 은행간 금리는 17%(6월 평균)이나, 대출금리는 27% 이상으로 매우 높음.

□ 정책금리 인상

- 가나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압력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5. 22일 정책금리(policy rate)를 15%에서 16%로 인상하였음.
 - 2012년초 12%였던 정책금리는 2012년 6월 이후 15%를 유지해 왔으며, 현재의 16%는 201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.

2. 재정난 완화를 위한 정부 대응방안

- 최근 가나 경제성장이 정부목표(8%)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, 세디화 절하 및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가나 정부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, 정부지출 제한, 세금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.
 -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유류보조금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류제품의 가격이 20~50% 인상됨.
 - 6월에는 도로교통부가 신규 도로계약 보류조치를 선언하기도 하였음.
- 2013년 상반기 가나의 재정적자 규모는 39억 세디로 낮아졌으며, 이는 GDP의 4.5% 수준으로 연중 재정적자 목표치(9%) 이내임.
 - * 2013년 상반기 재정수입 95억 세디 및 재정지출 134억 세디
- 하지만, 경기회복 지체 등으로 상반기중 세수가 당초 목표인 77억 세디에 못미치는 67억 세디에 불과하였고, 개발원조 등 해외로부터의 지원자금도 5.1억세디로 예상액의 41.8%에 불과하였음.
 - 재정적자 목표(상반기중 GDP의 4.5%)를 맞추기 위해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(146억 세디) 보다 적은 135억 세디로 조정하게 되어 인프라 투자 등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공공부문 임금지급 규모가 상반기 목표(43억 세디)를 초과한 47억 세디에 달하였는바,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임금,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절실한 상황임.

- 외국인(50만명 추산)에 대해 1인당 120불의 외국인카드 등록을 요구하고, 주택/상가 임대료의 8%를 임대인이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세원 확보에 나섬.
- 7월에는 10억불의 달러화표시 국채를 발행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.
 - 2.5억불은 2007년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(총 7.5억불)의 상환에, 나머지 7.5억불은 인프라 투자 및 2013년도 예산 보전 등에 사용할 계획임.
-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는 자국의 중소 및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외자유치가 절실한 가나 정부로서도 제조업, 수출업에는 외국인 최소투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, 외국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.
- 한편, 의회에서 의결된 세금인상 등 관련 법안은 현재 Mahama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음.
 - 서명 시기는 미정이며, Mahama 대통령이 의회가 제출한 법안내용 중 일부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.

3. 정부 정책에 대한 현지 반응

□ 업계 반응

- 지난 5월 가나 정부가 재정안정부과금 부활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, 민간 기업연합(Private Enterprise Federation)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증세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지적함.
 - 민간기업연합은 세금인상 대신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 - 아울러, 정부가 증세조치를 보류하고 의회, 업계, 학계, 연구계, 노동계 등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함.

- 통신회의소(Chamber of Telecommunications)는 가나 정보통신부문에 약 15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가나 GDP의 2.5%를 차지하고 있는바, 통신회사, 핸드폰, 무선통신기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함.
- 가나 핸드폰수입/유통업협회(Association of Mobile Phone Importers & Traders)는 핸드폰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가 핸드폰의 밀수를 초래하여 관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또한, 정상 수입된 핸드폰의 가격인상 효과를 가져와 결국 10만 3천명에 달하는 핸드폰 수입/유통업자들의 상거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며,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.
 - 특히, 그간 관세 면제조치에 힘입어 가나를 서부아프리카의 핸드폰 유통 거점으로 활용해 온 노키아, LG, iPhone, Blackberry, 삼성, Sony 등의 거대 기업들이 앞으로 가나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.

□ 의회 반응 (소수)

- 의회 재무위원회 Anthony Akoto Osei 위원은 자국내 핸드폰 생산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재정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며, 반대 입장을 표명함.
- 의회 식품농업코코아위원회의 Owusu Afriyie Akoto 위원도 농기계류에 대한 과세가 농민들의 생계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, Papa Owusu-Ankomah 의원도 선외 모터(outboard motor), 어망에 대한 과세는 어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법안의 수정을 제안함.
- Mathew Opoku Prempeh 의원은 절전용 전구에 대한 특별수입부과금(1%)은 에너지 절약정책과 상반된다고 하며 과세방침 철회를 요청함.

□ 기타 여론

-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상향(기존 30만불 → 100만불), 가나 인과의 합작(30% 지분) 의무조항, 통신기기에 대한 높은 관세(20%) 부과, 농기계 및 어망 등에 대한 과세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큼.